

광주지법에 대규모 전력 관련 소송 몰린다

전력계획 바뀌고 송전망 부족에 한전·거래소·정부 상대 소송 제기 한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손해배상 소송 등 매년 300여 건 달해 판매단가·태양광 출력 차단 조치 등 전국적 관심 속 소송 잇따라 접수

광주지방법원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한 중요 소송이 몰리고 있다. 전력 수급을 담당하는 공기업 한전과 한국전력거래소(거래소)가 나주에 자리하면서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각종 전력 관련 행정 소송들이 광주지법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정책을 뒤집은데다 고질적인 송전망 부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된 것이 소송 급증의 원인으로 보인다.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한전 소송 및 소송대리인 현황'을 보면 그동안 한전 관련 소송은 매해 300여건이 진행됐다. 지난해에도 한

전은 327건(제소 82건, 피소 245건)의 소송을 수행했다. 소송 종류를 보면 부당이득금 소송이 26.6%(87건)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55건), 구상금(39건) 순이었다.

절반에 가까운 소송을 차지하는 부당이득금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들은 대부분 한전 시설을 두고 발생한 토지소유주들과의 분쟁이었다.

최근 광주지법 제3·2민사부(항소부·재판장 남수진)가 모 재단법인을 비롯한 토지 소유자 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소송도 이와 비슷한 소송이었다.

하지만 최근 광주지법에는 전력 수급과 관련 전

국적으로 이슈로 부상할 수 있는 소송이 접수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강릉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업체가 최근 거래소를 상대로 송전망 부족을 고려해 전력판매단가를 올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한국전력거래소가 확정된 올 3분기 정산조정계수(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구매할 때 전력도매단가에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율)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광주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이 업체에 적용한 3분기 정산조정계수는 0.28이다. 예를 들어 전력도매단가가 1억원이면 이 업체는 2800만원을 기본으로 연료비 등 각종 변동비를 더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회사 측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이 업체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련 업체의 소송이 계속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전망 확충이 근본적 해결책이지만 한전이

2008년 계획한 동해안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 반발로 15년째 착공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제주지역 발전사업자 12명은 한전, 거래소, 정부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발전기출력 차단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아직 심리기일은 잡히지 않았지만, 변호인측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어 앞으로 지리한 소송전이 예고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정부의 태양광 출력 차단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올해 2월부터 계속된 출력차단 조치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노후원전인 한빛1·2호기 계속 운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 출력감소 문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 점에서 추가 소송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순탄광 협력업체 직원들 근로자 지위 인정...임금 차액 지급

118년만에 문을 닫은 화순광업소(화순탄광) 협력업체 직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원정 근로자와의 차액 임금을 지급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직원 A씨 등 13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의 소'에서 1명을 제외한 12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차액 총 8억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30일 밝혔다. 개인별로 차액 임금 3900만~1억5000여만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지난 2000년부터 2015년 화순탄광의 직업을 도급받은 협력업체에 입사한 직원들로 사실상 대한석탄공사 측의 지시·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해 근로자 지위가 있음에도 석탄공사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는 바뀌더라도 근로자들은 고용 관계에 계속 근무했고, 석탄공사 측이 인사·징계에 관여하는 등 원고들이 피고 측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임금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복장 지도하며 폭언” 고흥 학부모가 교사 고소

고흥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 교사가 학생의 복장 상태를 지도하면서 폭언을 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흥경찰청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의 옷차림을 지적한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고흥군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 담당 50대 여교사 A씨가 지난달 7일 동료 교사 2명이 있는 교무실 내에서 이 학교에 다니는 1학년생 B(14)양의 옷차림을 지적하며 수치심을 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교사에 대해 B양의 부모는 “복장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주지도 않고, 평소 생활지도를 이유로 막말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양의 부모는 경찰조사에서 “A교사가 지난 3월 학교에 부임한 뒤 생활지도를 핑계 삼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차례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며 “지난 4월께 교내에서 A씨의 태도 지적에 반문한 딸에게 욕설을 하고 10초간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는 내용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B양 부모의 요청에 따라 A씨를 학과 수업에서 배제하고 분리조치를 했으며, 전남도교육청은 학생 상담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만간 A교사를 소환 조사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드론 이용 농업 살포 농민들이 30일 오후 광주시 남구 칠석동에서 병충해 예방을 위해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고 있다. /L명주기자mjna@kwangju.co.kr

“지자체 지원 받았어도 불법매대 철거해야”

장흥토요시장 상인들 청구 기각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상인들이 지자체 지원을 받아 위생판매대를 설치했다가 지자체의 철거 계고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장흥읍 예양리 정남진장흥토요시장 상인 52명이 장흥군 수를 상대로 제기한 '계고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상인들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위생판매대를 설치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연발연시 및 설 병질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결과'에 따라 시장 상인들이 점포 앞에 상품적치물을 쌓아 놓고 장사한 행위가 공유(행정)재산 무단 점

유에 해당한다며 장흥군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장흥군은 상인들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추가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다.

상인들은 “2015년 장흥군이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위생판매대를 직접 설치해주고 수리까지 해주며 2021년까지 6년 동안 위생판매대를 사용했는데도 이 사실을 알고도 철거를 요구하기는 커녕 사용료조차 청구하지 않았다”며 장흥군을 상대로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매대를 설치해주고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단 점유·사용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은 아닌 점, 무단점유부 분을 사용하지 못할 뿐 허가받은 곳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퇴원 거부 환자, 병원서 강제로 내보내면?

법원 “법적 절차 안따른 임의 퇴거 불법...환자에 배상하라”

병원이 환자를 퇴원 처리 했음에도 환자가 2달이 넘도록 병원에서 퇴원하지 않고 있다면 병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퇴거할 이유가 있더라도 강제로 내보내면 안되고, 법적 절차에 의해 퇴거를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A(여·85)씨가 순천시 B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입원환자지위확인'의 소'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에게 30만원을 배상하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2일 오른쪽 대퇴골

골절로 B병원을 찾았다.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수술을 받은 뒤 지난해 1월 6일 B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B병원 의료진은 이후 지속적(최소 8회 이상)으로 A씨와 A씨 보호자에게 “1월 21일 이후에는 재활 치료 외에 추가적 처치를 할 것이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퇴원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병원도 1월 21일 이후 A씨에 대한 의료행위를 중단하고 퇴원 처리를 했으나, A씨는 3월 16일까지 병원에서 나가지 않았다.

결국 병원 직원들은 3월 16일 A씨를 임의로 병상

에서 끌어내러 옮기고 A씨가 탄 휠체어를 병원 로비에 머물게 하는 방법으로 퇴원을 시켰다.

이에 A씨는 B병원이 진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와 B병원은 치료위탁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른 진료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환자는 자유로이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진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의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입원 진료계약을 해지하고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법적절차에 의하지 않은 임의 퇴거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일반인의 왕래가 많은 장소인 병원 출입구 로비에 머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